

“비핵화 실무 협상, 3차 북미회담으로 이어져야”

문 대통령, 트럼프와 한-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정신 여전히 유효
70년 적대관계 종식...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의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개월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의 정신이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70년 가까이 이어진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인터콘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민청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 직후 브리핑을 열고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두 정상은 북미 실무 협상에서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에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재개돼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시 밝은 미래를 준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두 정상은 북미 간 실무 협상 재개시 실질적인 진전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기존의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방침을 바꿨는지는 분명치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 콘셉트(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한 경제 완화 방안이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제재는 유지가 돼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며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두 정상 간의 말씀은 없었다”고 했다.

앞서 회담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한미 동맹 강화 방안도 논의... “호혜적 방향으로 발전”

韓, 美 LNG 추가 구매... 기업간 자율주행 기술 협약

문 대통령, 공평한 방위비 분담 강조... 지소미아 논의 안대

감을 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가 좋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협상이 열리리라고 기대를 한다”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적인 대전환을 만들어 내는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오랫동안 북한이 전혀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북한과의 관계는 아주 좋다. 그런 점에서 지켜야 할 것이다. 민안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해도 상관없다. 오랫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오후 5시30분부터 6시35분까지 약 1시간 5분동안 진행

됐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 외에도 한미 동맹 강화 방안과 양국간 현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고 대변인은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에 핵심 축으로써 추후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두 정상은 양국간 경제 협력을 포함해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한미 동맹을 지속 강화시켜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욕에서 한국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과 한미 기업간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계약이 체결됐다”며 “한미 정상은 이 두건의 계약으로 양국간 경제 협력이 에너지와 신성장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확대하는 문제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우리의 (구매)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두 정상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 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로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우리 정부가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두 정상은 11차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한미간 이상 기류의 원인이 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IA·지소미아) 문제는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뉴시스

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안 실국별 심사

기획조정실 등 대상 “잼버리대회 개최 관련 국가예산 확보 노력할”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무주)는 24일 전북도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실국별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보건환경국 심사에서는 나기학 위원(더불어민주당, 군산), 김명지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8), 김정수 위원(더불어민주당, 익산2), 이병도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잼버리추진단의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 사업(450억원)에 대한 필요성, 운영 계획 미수립 등을 지적하며 대규모의 도예산이 투입되는 센터 건립에 대해 센터 자립화방안 및 행사 종료 후 활용방안 마련,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와 관련한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을 당부했다.

김기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복지여성보건국의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차상위층 1인에게 18매의 일회용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유사사업이 기 실시되고 있다가 사업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고민청 기자

고교무상교육법 국회 교육위 통과

본회의 상정 의결 예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표결에 부처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2024년까지 부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6월 한국당의 요구로 국회 교육위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전학년 무상교육 시점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활동시한이 종료됐다.

안전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는 절차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구성되고 최장 90일간 운영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 2학년, 오는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을 얻는 고교 3학년을 겨냥한 선거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지라고 주장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뉴시스

한국 P4G 정상회의 성공 개최 협력

〈녹색성장 2030을 위한 연대〉

한-덴마크 정상회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이하 현지시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의 등 기후 대응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 허드슨 야드에서 열린 한-덴마크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내년에 개최하는 P4G 정상회의 개최 등 기후분야 협력, 한반도 정세, 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P4G는 덴마크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글로벌 녹색성장 포럼을 확대·발전시킨 협의체다. 우리나라와 덴마크를 비롯해 베트남, 네덜란드 등 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1차 정상회의는 지난해 10월 덴마크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10월에 1차 P4G 정상회의의 참석차 덴마크를 방문했다”며 “코펜하겐은 자연과 사람이 서로 아끼면서 역동적인 발전을 이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1차 P4G 정상회의에 이어 지구촌 포용사회의 정신을 잘 이어가는 2차 P4G 정상회의가 되도록 덴마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총리께서도 꼭 함께해서 자리를 빛내 주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프레데릭센 총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P4G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후 변화라는 주제가 있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화답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 있어서 여러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고 우리 덴마크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허드슨 야드에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한-덴마크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러기를 바란다”며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올해 6월 덴마크의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면서 “프레데릭센 총리의 역동적이며 소름하는 리더십으로 덴마크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에 기원한다”고 말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양국간 우호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신 덴마크 정부는 앞으로도 더욱 더 한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덴마크의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인적 교류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

대하고자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덴마크가 교역 확대뿐 아니라 인적 교류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며 “인적 교류도 더욱 발전시켜서 지향노선도 개설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덴마크는 메디콘 밸리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의 오송 생명과학단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호 진출 등 양국 바이오 기업간 협력 확대를 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상황 속에서 양국의 긴밀한 조선 분야 협력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의 공동기술개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탄소배출 없는 선박 관련 내용은 덴마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 “기후변화 대응 책임 다할 것”

“2차 P4G, ‘서울 선언문’ 채택”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성장 모델을 제시해 인류 공동번영의 길을 찾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덴마크와 공동 개최한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행사에 참석, 연설을 통해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책임있는 중견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녹색성장과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해온 경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그 경험을 공유하면서 P4G와 녹색기후기금,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연계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처럼 어려운 과제도 부담을 나누고 힘을 합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탈탄소화를 위한 실천 10년’이 시작되는 해”라며 “한국도 행동과 이행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2차 P4G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덴마크가 지난해 개최한 ‘제1차 P4G 정상회의’의 성과가 심화·발전되고 실질적인 행동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선 경험을 가진 덴마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참여와 행동’이라는 P4G의 기본정신이 더욱 확대·발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며 “환경산업,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업·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제2차 P4G 정상회의’의 민간 참여 행사는 참여하는 정부와 민간 파트너들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소개하고 기업 간 기술을 교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물, 식량·농업,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의 5개 분야별로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해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자 한다”며 “1차 P4G 정상회의에서 ‘코펜하겐 행동선언’이라는 성과가 있었다. ‘서울 선언문’ 채택으로 ‘코펜하겐 행동선언’을 심화·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 대응’, ‘스마트시티’, ‘청년과 여성의 참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홍수, 태풍, 대기질 문제는 이제 ‘기후위기’라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세계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비상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인류가 함께 행동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참여와 행동’이라는 P4G의 기본정신이 더욱 확대·발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며 “환경산업,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업·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제2차 P4G 정상회의’의 민간 참여 행사는 참여하는 정부와 민간 파트너들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소개하고 기업 간 기술을 교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물, 식량·농업,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의 5개 분야별로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해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자 한다”며 “1차 P4G 정상회의에서 ‘코펜하겐 행동선언’이라는 성과가 있었다. ‘서울 선언문’ 채택으로 ‘코펜하겐 행동선언’을 심화·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 대응’, ‘스마트시티’, ‘청년과 여성의 참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홍수, 태풍, 대기질 문제는 이제 ‘기후위기’라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세계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비상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인류가 함께 행동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내년은 ‘탈탄소화를 위한 실천 10년’이 시작되는 해”라며 “한국도 행동과 이행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2차 P4G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덴마크가 지난해 개최한 ‘제1차 P4G 정상회의’의 성과가 심화·발전되고 실질적인 행동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선 경험을 가진 덴마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참여와 행동’이라는 P4G의 기본정신이 더욱 확대·발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며 “환경산업,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업·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물, 식량·농업,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의 5개 분야별로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해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자 한다”며 “1차 P4G 정상회의에서 ‘코펜하겐 행동선언’이라는 성과가 있었다. ‘서울 선언문’ 채택으로 ‘코펜하겐 행동선언’을 심화·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 대응’, ‘스마트시티’, ‘청년과 여성의 참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홍수, 태풍, 대기질 문제는 이제 ‘기후위기’라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세계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비상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인류가 함께 행동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국정원 “북미실무협상, 2~3주내 재개 가능성 높아”

국가정보원은 24일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향후 2~3주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0월6일 북중수교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다섯 번째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 회담을 가질 것으로 봤다.

국정원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0월6일 북중수교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다섯 번째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 회담을 가질 것으로 봤다. /뉴시스